

尹 탄핵심판 구체적인 선고 절차

재판관 전원 일치하면 ‘이유 설명 후 주문 낭독’ 관례

반대 의견 있을때 ‘주문’ 먼저 선고 직전 최종 판결 거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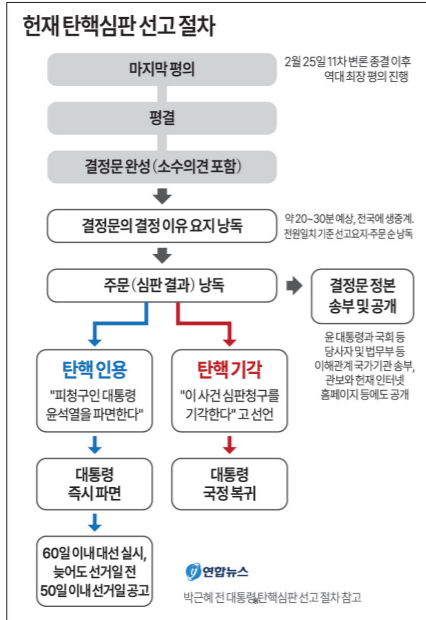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판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큰 틀의 결론은 낚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라 보편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판결을 열고 결정문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은 주심인 정형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헌해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주문을 마지막으로 점결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



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장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임장에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인의 증대성을 고려해 양측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들로 갈라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백남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정정(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정정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 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정

정에 대한 판단이나 증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지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현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현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尹 심판,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매듭

11회 변론·16명 증인 거친 역대 최장기간 평의

두차례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 의결... 변론 종결 38일만 결론 구속부터 기소·구속 취소까지 수사·형사재판과 함께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 짓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헌법재판소가 4일로 최종 확정하면서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현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직무 집행을 위한 위법성을 심사했다.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현재에 접어들었다. 일주일 앞서 열린 1차 탄핵안 투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했다.

사건을 접수한 당일 현재는 “2024년 8”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12월 19일 관련 서류를 발송송 달했고 20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 인 절차가 진행됐다.

현재는 12월 27일과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만에 끝났고 이를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이를 뒤 열린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양측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발표를 들었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총 6번 변론에 16명의 증인이 나왔다.

장과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지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 증언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인 2월 20일 오전으로 잡하자 현재가 탄핵심판 변론 시작 시간을 같은날 오후 2시에서 한시간 늦추기도 했다.

현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수위원인 정청래 국회의원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이날 고지한대로 사흘 뒤인 4일 선고하게 되면서 현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것이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뒤 선고에 임하게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인 2월 20일 오전으로 잡하자 현재가 탄핵심판 변론 시작 시간을 같은날 오후 2시에서 한시간 늦추기도 했다.

현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수위원인 정청래 국회의원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이날 고지한대로 사흘 뒤인 4일 선고하게 되면서 현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것이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뒤 선고에 임하게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 광주 북구갑, 윤석열 탄핵 촉구 서명운동

우산근린공원에 천막 설치... “민주주의 지켜낼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정준호 국회의원)가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촉구 긴급 천막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예정된 4월 4일 오전 11시를 앞두고 그 72시간 전인 1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서명운동은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 설치된 천막 부스에서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현장을 지키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정권 심판을 향한 지역민들의 열망을 함께 나누는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준호 국회의원은 “기다려라 지지기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서명운동으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일 목포 폰타나비치호텔에서 2025년 종합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열린 '전남체육회 회원총무단체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성공개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체전·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 다짐

도, 목포서 전남체육회 72개 회원총무단체 회장 간담회

전남도는 1일 목포 폰타나비치호텔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종합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오는 18일부터 4일간 장성 엘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전라남도체육대회, 24일부터 3일간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각각 열린다.

전남도는 이번 체전을 위해 장성 흥길

동체육관,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수영장 등 경기장 개보수에 26억원,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안전요원 350여명을 배치하고 응급·소방차량도 상시 대기해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총무단체 회장단의 참여와 도내 식당, 숙박업소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산업기술 보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강수훈 시의원 ‘보호체계 기대’



을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보안 진단,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광주지역 기업들의 산업보안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민주당, 서구1·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해 광주 관내 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광주시장은 5년 마다 산업보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산업보안 수준과 기술 침해 현황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강 의원은 “지역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광주경제의 성장 동력이며,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손실을 넘어 지역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산업보안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서임식 ‘광주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결

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서임석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이는 광주시가 인구위기를 넘어 인구절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며 광주시의 출산율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는 5개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광주시의회는 앞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광주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광주 여건 조성 및 개선,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

망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럼·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또는 기관·단체 등



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서임석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이는 광주시가 인구위기를 넘어 인구절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며 광주시의 출산율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는 5개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광주시의회는 앞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